

“뚝뚝한 한채, 투기할 기회 만들어 잘못된 가격 정상화가 정책목표”

李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전문가·시민 등 모여 193분 토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시민들이 모여 총 193분 동안 주택 공급 확대, 대출,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13분에 종료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1시 40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면서 예정보다 93분 더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고, 조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세 부담이 적정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쟁점이라며 “조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 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실거주자에게만 종합부동산 세 혜택을 줄 경우 서울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를 거주 여부 관계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거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최근 매입자와 장기 보유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구멍 없이 강력해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로 새로운 공급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병목을 해소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입주부터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복원하고 정비 사업과 민간임대, 비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다. 이주비가 부족해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마트규제 완화, 골목상권 현실 외면”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추진에
수퍼마켓 연합회 “보호 대책이 먼저”
시민단체 “새벽배송,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충분한 보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도 온라인 배송에 한해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의무휴업 자율화를 골자로 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없는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사과가 놓여 있다. /뉴시스

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은 중소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중소유통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질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규탄 성명이 나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2년 도입된 현행 규제가 온·오프라인으로 재편된 유통시장 환경과 맞지 않아 오프라인 유통 경쟁력을 떨어뜨

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공휴일의 무휴업 규제를 받아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막혀 있다. 반면 쿠팡 등 이커머스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은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기준점 성장률은 약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도 5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11년 9%에서 지난해 7%로 줄었고,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도 2011년의 10분의 1 수준인 867억 원까지 감소했다.

기존 영업 규제가 당초 목적인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규제 완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부산·서울 서초·동대문 등에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7.9%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구 골목상권 매출은 15.39%,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12.79% 늘어 지역상권 전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기술로 美 조선업 재건 돕는다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1500억불 협력투자 빠르게 진행”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 AI·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끌 전진기지가 워싱턴 D.C. 현지에 닿을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의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국 상무 장관을 비롯해 미 해군부 장관 대행,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및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대형 3사 대표 등 130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환영사에서 “KUSPC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0억불에 이르는 조선협력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한 ‘Team Korea’ 구축, 공급망, 인력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년간 총 1200억 원(약 8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무인 함정 제어 등 8대 차세대 국제공동 R&D 과제를 미국 주요 대학·기업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종건 KUSPC 센터장은 “한-미 정부와 조선소, 대학·연구기관, 투자를 하나로 잇는 허브로서 미국 조선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조선소 대상 생산성 컨설팅, 한-미 공동 기술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미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KUSPC는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66억 원)을 시작으로 미 현지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국내 생산 분야 퇴직 전문기술을 활용한 미국 야드 공정 개선 컨설팅과 기술 자력 인증 프로그램 등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기술경쟁, 중대 전환점에 있어…국회 협조 중요” /서진 뉴시스
▲국힘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헌재 “인정 못 해” 각하

▲김민석 “예비경선 끝나면 신천지 등 정리해 말할 것”
▲김건희 상고심 선고 무기한 연기…대법,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순직 심의에 첫 국민 참여 추진…특별성과 공무원 포상
▲합수분,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관련 중앙선거위 등 압수수색